

사우디아라비아의 자국민 의무고용 제도 강화 배경과 전망

■ 사우디 정부는 최근 외국인 투자법 개정을 통해 외국 기업에 대한 자국민 의무고용 비율 상향 조정, 일부 업종 외국인 고용 금지 등의 강력한 자국민 의무고용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사우디 투자청은 2016년 2월 16일 외국 기업의 투자 자격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투자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여기에는 사우디인 의무고용 비율을 75%로 상향 조정하고 기진출 외국기업에도 2년 내 소급적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도 포함됨.
- 알 하끄바니(Mufrej Al-Haqbani) 노동부 장관은 3월 10일부로 3개월 내 휴대폰 및 관련 액세서리 판매점, 수리점 종사자의 50%, 6개월 내 100%를 사우디인으로 고용하는 것에 대한 정책을 3월 8일 발표하였음.
- 또한 여성복, 액세서리, 속옷 등 여성 관련 소매점 노동자의 100%를 사우디 여성으로만 고용토록 하는 장관령 추진을 위해 부처간 협의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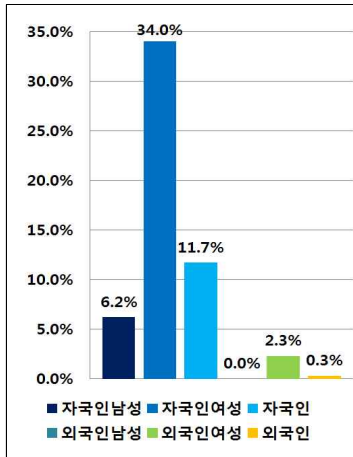
■ 사우디 정부는 아랍의 봄 이후 청년실업 문제가 정정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 유가 하락에 따른 정부 재정 수입 감소로 공공 부문 고용이 제한되면서 민간 부문에 대한 사우디인 의무고용 제도를 점차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

-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사우디 내에서도 청년들의 높은 실업률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산업별, 기업 규모별로 사우디인 의무고용 비율을 정하고 준수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나 제재를 가하는 니타카트(Nitaqat) 제도 도입, 공무원 임금 인상, 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막대한 정부 예산 투입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 왔음.¹⁾
- 그러나 2014년 하반기 이후 급락한 유가의 영향으로 정부 재정수입이 감소하면서 공공 부문 고용 확대 및 급여 인상도 어렵게 되자 정부는 민간 부문의 자국민 의무고용을 강화하는 정책을 통해 실업률 하락을 유도하고자 함.

1)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GCC 국가는 1970년대 이후 부족한 자국민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 인건비가 낮은 외국인 노동자를 민간 부문에 대거 고용해 왔으나 이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자국민 고용을 위협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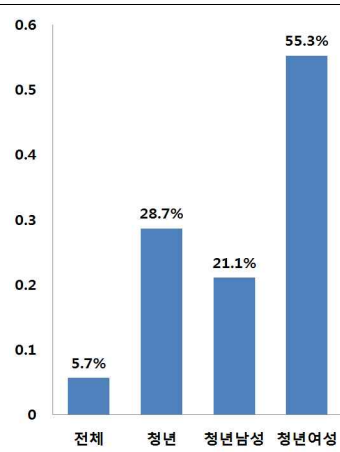
KIEP 동향세미나

그림 1. 국적별 실업률(2014년)



자료: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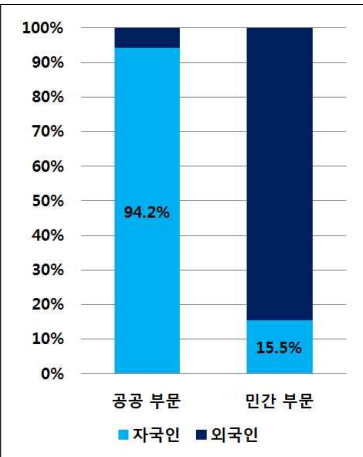
그림 2. 청년 실업률(2014년)



주: 청년실업률은 15-29세 사이 경제 활동인구 대상.

자료: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

그림 3. 부문별 고용비중(2014)



자료: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

■ 사우디의 자국민 의무고용 정책은 향후에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것은 사우디의 FDI 유입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으며,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경영난도 심화될 수 있음.

- 사우디 정부에는 경제 성장보다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이 정권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의 경제 성장 위축, 재계의 불만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현 제도를 유지 및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2009년 사우디의 FDI 유입액은 400억 달러로 GCC 지역의 70.9%를 차지했으나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여 왔음. 사우디의 FDI 유입 감소는 강화되고 있는 자국민 의무 고용제도와 무관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우리 건설사들도 니타카트 제도 실행 이후 고용 비용 증가, 공기 지연 등으로 영업 실적이 악화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자국민 의무고용 제도가 강화될 경우 현지에 진출한 건설기업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음.

<자료: SAMA, Saudi Gazett, Al Arabiya, Al Bawab 등 현지 언론>

손성현 (KIEP 아중동팀 전문연구원)

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세미나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동향세미나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